

KIEP

지역경제 포커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06월 12일

ISSN 1976-0507 Vol. 3 No. 18

인도 통일진보연합(UPA) 재집권과 전망

조 총 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(cjcho@kiep.go.kr, Tel: 3460-1025)

송 영 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(ycsong@kiep.go.kr, Tel: 3460-1039)

■ 지난 4~5월 약 1개월간 치러진 인도 총선에서 현 집권연정인 통일진보연합(UPA)이 예상을 초과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며 재집권에 성공함.

■ 이번 총선의 최대 의의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임.

- 좌파정당들과 야당들의 몰락으로 1990년대 이후 가장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확보 되었고, 총선결과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환율이 급락하였으며, S&P 등이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을 비추는 등 신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높아짐.

■ 향후 경기부양 및 개혁개방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.

- 추가금리 인하, 인프라투자 확대, 수출업자 지원 확대, 중산층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대책이 7월 초 예산안에 반영되고 민영화와 보험 및 소매업 부문 시장개방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용외교정책도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.

■ 총선 이후 주요 기관들이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지만 글로벌 경기위축의 제약으로 2009/10년 6%대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.

- 모건스탠리, 시티, UBS 등은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1~1.4%포인트 상향조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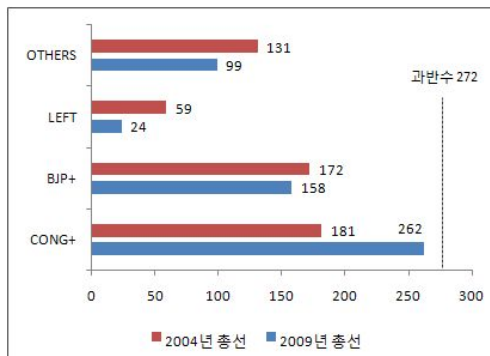
■ 한국정부는 UPA 재집권을 계기로 한·인도 CEPA를 조기 발효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, 우리기업들은 향후 전개될 경기부양정책과 금융 및 소매업 시장개방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.

1. UPA 재집권 성공

- 2009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현 집권연정인 통일진보연합(UPA)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함.
- UPA는 총 543석의 연방하원의석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262석을 차지하였으나, 기타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손쉽게 확보하고 신정부를 출범시킴.
 - SP(23석), RJD(4석), BSP(21석) 등 외부지원 세력을 통해 UPA는 총 322석을 확보함.
- 제1야당인 BJP는 15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, 이는 리더십 부재와 극우힌두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.
- 좌파정당은 제4전선의 탄생으로 세력기반이 분산되며 2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.

표 1. 인도 총선결과

구분	09년	04년 총선 대비
UPA : CONG+	262	+81
NDA : BJP+	158	-14
LEFT	24	-35
OTHERS	99	-32
SP	23	-12
BSP	21	+2
RJD	4	-20
BJD	14	+3
TDP	6	+1



자료: 보도자료 정리.

- 이번 총선은 경제성장과 범민족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.
- 지난 5년의 집권기간 동안 UPA는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으로 연평균 8.7%라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세계 경제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UPA는 집권기간 동안 카스트와 종교 갈등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보인 것은 물론 무슬림과 하층카스트에 대한 각종 할당제를 확대하는 등, 인도 통합에 중점을 둔 범민족주의적 정책을 실시함.¹⁾

1) UPA는 공공기관(공무원 임용), 교육(대학입학) 등의 분야에서 하층카스트와 무슬림에 대한 할당제를 확대함.

2. 정치적 안정성 및 대외신뢰도 제고 계기

- 이번 총선결과와 최대 의의는 UPA의 압도적 승리로 좌파정당과 분리됨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임.
- 좌파정당은 UPA연정을 지지하면서도 개혁정책 및 시장개방 등에 줄곧 반대해왔으며, 2008년 10월에는 미국과의 핵협정 체결에 반발, 연정지지를 철회하여 UPA정권이 의회 재신임 투표를 거치는 상황까지 발생함.
- 재집권에 성공한 마모한 싱 총리는 주요 내각 대부분을 국민회의당(Congress) 인물들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, 정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.
- 싱 총리는 지난 5월 23일 내무, 외무, 재무, 국방, 철도, 농업부 등 6개 주요장관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 중 철도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민회의당 출신으로 구성함.
- 좌파정권과의 분리에 따른 경제개혁 추진의 연속성 확보 및 불확실성 제거는 인도의 대외 신뢰도 제고와 함께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총선결과 발표 첫날인 5월 18일(월) 인도 뭄바이 SENSEX지수는 전일대비 17% 폭등하였으며, 5월 말까지 14,600포인트를 돌파해 연초 대비 약 47% 급등함.
- 같은 날 루피/달러 환율 역시 전일대비 2.8% 하락하였으며, 5월 말까지 2.9% 하락하는 등 신정부에 대한 시장의 높은 정책 신뢰도가 나타남.
- S&P는 총선 이후 인도의 정치적 안정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함.

그림 1. 인도증시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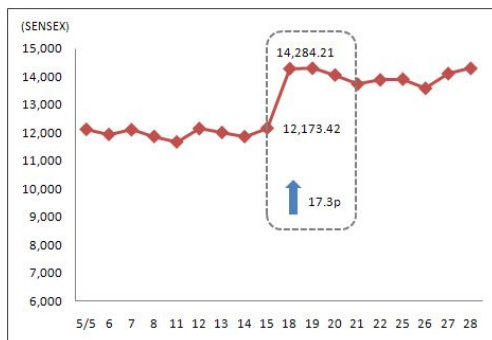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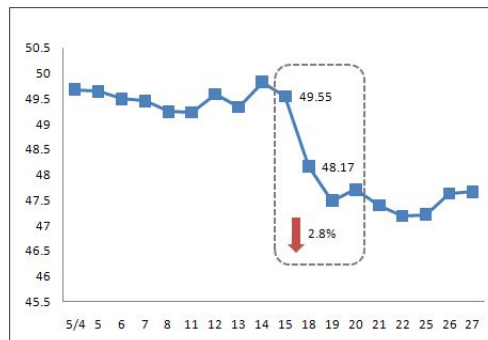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대미환율 변화 추이



자료: 인도 중앙은행; 야후파이낸스.

3. 경기부양 및 개혁개방 정책 강화 전망

■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 금리인하를 포함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, 기존 부양책에서 실시되었던 인프라 부문 투자 및 감세,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, 중산층 지원 강화 등이 신정부 예산안에²⁾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.

- 광공업 생산이 올 2, 3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, 총선공약으로 '집권 100일 내 경기회복'을 내세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불가피함.
- 특히 지난 3월 이후 도매물가가 1%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, 올해 안에 최소 50bp 정도의 금리인하가 기대됨.
- 추가적인 재정확대정책은 제한적이나 인프라 투자, 섬유 및 보석가공 등 수출 부문에 대한 이차지원(Interest subsidy) 연장 등 세제지원은 강화될 것임.
- 또한 FBT(Fringe Benefit Tax) 철폐, 개인 소득세 감면 등 중산층의 실질소득 향상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등도 신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.

■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- 수출, 통상 FDI 분야에서 보다 과감한 자유화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, 그간 좌파세력의 반대로 지연되어온 연금개혁, 보험, 은행, 소매업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개혁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.
 - 현재 연금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인도 파트너와의 합작형태로(26%까지) 제한되어 있으나 신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으로 향후 49%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 - 보험 부문의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(기존 26%), 외국인투자자의 은행 의결권(기존 10%) 확대, 소매업 시장개방(현재 단일브랜드에 대해 외국인투자 51%까지 허용) 완화 등도 기대됨.
- 전 UPA연정에서 중단되었던 민영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.
 - 재정압박 없이 인프라 투자 재원 등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, 싱 총리가 지난 2004년 집권 초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공산계 정당 등의 반대로 지난 연정에서 단 1건도 추진하지 못했음.
 - 2009년 6월 3일 인도 신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걸고, 2009/10 회계연도에 약 6.6조 원 규모의 민영화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함.

2) 신정부 예산안은 2009년 7월 초까지 심의, 통과될 전망이다.

■ 농민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실용외교정책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.

- 대중적 지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총선결과에 대한 보은으로도 농민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.
- 총선 슬로건으로 “보통사람의 발전으로 인도의 번영을” 등을 적극 강조한 만큼 농민, 하층카스트 및 여성, 노인, 무주택자 등을 위한 교육 및 보건, 금융지원, 고용창출 정책 등이 강화될 것임.

표 2. UPA 정부의 정책방향(선거공약을 중심으로)

구분	주요 내용
경제 부문	- 추가 금리 인하* -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민간 참여 확대* - 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계획* - 소매, 방산, 보험 부문 등 FDI 규제 완화 검토 - 공기업 민영화 재추진 - GST(Goods and Service Tax) 도입 추진³⁾ - 중소기업 지원 - 노동법 개선
사회 부문	-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복지 지원 -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장학금, 학자금 대출 확대 - 농촌지역 일자리 보장 및 실질임금 개선(NREGA) - 'Food law'를 통한 식량 지원(빈곤자 대상) - 하급계층 및 여성, 노인,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강화 - 농촌지역민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 확대 - 농민들을 위한 곡물가격 보장 - 농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제 폐지 고려
통상 부문	- 무역자유화 정책 지속
안보·외교 부문	- 테러에 대한 '제로관용' 정책 - 최신 무기 및 기술 도입으로 국가 방위체계 강화 - 주변국 및 주요국들과의 외교관계 강화

주: * 추가 경기부양책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정책들임.

자료: UPA 선거공약 자료 및 보도자료.

- 외교 부문에서는 안보 강화와 실용외교 정책노선이 지속 유지될 전망이다.
- 뭄바이 테러사건으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았던 UPA는 안보 강화와 테러에 대한 '제로관용'의 입장을 강화하며, 군사력 강화에 힘쓰는 등 안보 부문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됨.

3) GST는 부가가치세, 소비세, 서비스세, Entertainment Tax, Luxury Tax 등을 통합한 것임.

- 이에 따라 파키스탄과의 평화공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겠지만, Mumbai 테러사건이 아직 미결 상태이고 향후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, 과거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어 파키스탄과의 긴장관계는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.
- 최근 내전이 종결된 스리랑카, 신임 총리가 들어선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에 대한 인도의 지원과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.
-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지속적 고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세계 평화를 강조하며, 미국, 일본, EU,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도 보다 강화시켜 나갈 것임.

4. 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

■ 글로벌 경기위축의 제약으로 2009/10년도에는 6%대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.

- 총선 이후 주요기관들은 인도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함.
 -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개혁정책 및 투자활성화를 근거로 모건스탠리, UBS, 시티 등은 인도의 GDP 성장 전망치를 각각 상향조정함.
 - EIU도 UPA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모한 싱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개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으로 향후 개혁정책 추진에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전망함.

표 3. 인도 총선 이후 주요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

구분	2009/10		2010/11	
	기준	수정	기준	수정
모건스탠리	4.4	5.8	6.2	6.8
UBS	5.2	6.2	7.4	7.8
CITY	5.5	6.8	6.6	7.8

주: 인도 회계연도(매년 4월~익년 3월) 기준.
자료: 각 기관 보고서, 보도자료 참조.

- 실제로 올 2, 3월 승용차 판매가 증가세로 반전했으며, 3월에는 시멘트, 디젤 사용량이 증가하고 항만 물동량도 소폭 늘어나는 등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함.
- UPA의 재집권으로 한·인도 CEPA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양국간 조속한 CEPA 본 서명 및 국회비준을 통한 조기발효로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.

- 인도정부는 ‘100일 내 경기회복’이라는 의제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계획을 포함시켰으며 인도 상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한·인도 CEPA를 마무리지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.
-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인도·일본 FTA가 조속히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한·인도 CEPA의 조기 발효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.
- 또한 한·인도 CEPA에서 처음으로 독립전문가(IP: Independent Professional)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것에 적극 대비, 인도 전문인력 활용대책 마련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.
- 인도 신정부의 개혁정책 및 시장개방 확대를 대인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인도는 중국과 함께 글로벌 경기위축 상황에도 가장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음.
 - 글로벌 경기위축에도 인도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, 휴대폰 등이 높은 경쟁력과 함께 견조한 시장 성장세를 유지함.
- 향후 전개될 금융 및 소매유통업 부문의 개방 등을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통상 신정부 출범 1년 이내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, 과거 어느 때보다 금융업과 소매유통 부문 개방 확대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